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유OO (53년생, 남자), 국회의원
주거 전남 **군 **읍 ***
2. 김OO (46년생, 남자), 어린이집 대표
주거 전남 **군 **읍 ***
3. 신OO (52년생, 남자), 공업사 대표
주거 전남 **군 **읍 ***

검 사 윤동환

변 호 인 변호사 조OO(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이OO(피고인 유OO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08. 7. 14.

주 문

피고인 유OO, 신OO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김OO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유OO, 신OO

피고인 유OO는 2008. 3. 14. OOOO당의 공천을 받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OO·OO·OO선거구 당선자이고, 피고인 신OO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유OO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선거연락소장, 2005. 9.경에 조직된 OO당을 후원하는 친목단체인 OOOOOO회(약칭 OO회)의 총무인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정견발표회 등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 피고인 신OO는,

2008. 3. 중순경 자신이 총무로 있는 OO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유OO를 참석시켜 인사 및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유OO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OO회 회장인 고OO과 함께 2008. 3. 20. 17:00경 전남 OO군 OO읍 OO리에 있는 OO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OOOO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박OO의 강진군민의 상 후보추천안을 의제로 한다는 명목으로 OO회 회의를 소집한 다음, 2008. 3. 18.경 피고인 유OO의 보좌관인 기OO을 통하여 피고인 유OO에게 위 회의가 있다고 알려주고, 2008. 3. 20. 17:20경 OO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OO회 회원 등 15명과

OOOO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박OO의 OO군민의 상 후보추천안건에 관한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 유OO가 오지 않자, 기OO에게 전화로 피고인 유OO로 하여금 위 회의에 빨리 참석하라고 재촉을 하였고, 피고인 유OO는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OO회 회의에 참석하여 OO회 회장인 고OO의 소개로 OO회 회원 등 회의참석자 15명에게 인사를 하면서 "공천을 받고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침 모임이 있다고 하여 인사드리기 위해 들렸습니다. OOOO당의 실책으로 인기가 없어 이번 선거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참석자들로부터 OO이 원래 OO와 한 선거구였는데,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OO·OO에 더부살이로 붙어있게 되었다면서, 당선되면 OO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유OO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정견발표회·좌담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유OO는,

위와 같이 피고인 신OO가 개최한 OO회 모임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피고인 유OO, 신OO는 공모하여,

2008. 3. 중순경 피고인 유OO는 보좌관 기OO를 통하여 피고인 신OO에게 "OO군 지역의 원로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신OO는 2008. 3. 19.경 전남 OO군 OO읍 OO리에 있는 'OOO'이라는

식당에 2008. 3. 20. 18:00 OO지역 원로들이 식사할 자리를 예약하고, 전화로 윤 OO 등 OO지역 원로들에게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한 다음, 기OO을 통하여 피고인 유OO에게 "20일 저녁 6시에 OOO에 모임을 잡아 놓았다"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유OO는 2008. 3. 20. 18:00경 위 OOO 식당에 가서 OO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여 윤OO 등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역 원로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유OO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좌담회·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김OO

2008. 3. 20. 18:00경 위 OOO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O지역 원로들과 유OO 예비후보 간의 상견례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유OO 등 10명이 꼬리곰탕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신OO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한 OO회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미리 예약해 두었던 또 다른 방에서는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식사하러 온 OO회 회원 등 15명이 꼬리곰탕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김OO는 위와 같은 2개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OO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위 2개의 방의 OO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및 OO회 모임 참석자 총 25명의 식사대금 합계 314,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유선호 예비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유OO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개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신OO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피고인 유OO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O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OO, 신O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유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신OO와 공모하여 OO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유OO가 피고인 신OO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2008. 3. 20. 17:00경 OO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OO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정견발표회·좌담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유OO, 신OO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문답서, 기OO, 고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답서, 기OO, 윤OO, 신OO의 각 녹음녹취록, OO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국내역발신조회내역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신OO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2008. 3. 20. 17:00경 OO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서 OO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인 유OO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2)항과 같이 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판시 제1의 가.(2)항 기재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은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 관하여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미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유OO에 관한 양형 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적법한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한 규정과 형벌 규정을 둠으로써 그간 혼탁·과열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우매한 촌로(村老), 촌부(村婦)에게조차 유보 없는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피고인은 스스로가 15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장본인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동안 엄한 처벌을 받아 온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자들과 동일하게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저지른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개최 또는 참석한 모임인 OO지역 원로모임이나 OO회 회의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OO당, OO회의, OOOO당을 거쳐 OOOO당 또는 OO당(통합 이전)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과는 동질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자들이고, 비당원이나 일반인 또는 전혀 다른 정치성향을 지닌 자들을 상대로 한 여타 무차별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비해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OOOO당의 전신격 정당인들 내지는 동질적 정치성향을 지닌 소규모의 사람들을 모아, 또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자로서 분발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태양,

공범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매우 후회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당선무효에까지 이르게 하는 형에 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_____

 판사 박정제 _____

 판사 임수희 _____